

맞올린 與 ‘김병기號’…“내각 구성·추경 처리 최우선”

당대표 대행 첫 최고위원회의 주재 청문회·입법 위해 野에 대화 제안 형사소송법 등 쟁점법안 속도 조절 “대통령 민생행보에 당 보조 맞춰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집권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16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조속한 내각 구성과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집권 여당이 된 만큼 야당과의 대화·협치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완전한 내란 종식, 민생 경제 회복, 국민 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며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불침 항공모함이 되겠다. 국정 안정,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에서 유능한 이재명 정부의 실력을 아낌없이 보여주시기를 성원한다”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도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시급한 민생 추경과 민생 개혁 법안들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관세 대응 등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각 구성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국무총리 인준과 민생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경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무위원 18명 중 13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며 “장관 임명 제청권을 가진 총리 국회 인준이 최우선 과제이고,

민생 추경 처리와 민생 개혁 법안도 소홀히 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가 신설해 임명한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새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여러 입법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인사청문회는 기본적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새 원내지도부는 야당과의 대화·협치도 강조했다. ‘내란 종식’과 야당과의 대화는 별개라면서 국정 안정을 위해 야당과 생산적 대화에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겠다는 것이다.

문 수석부대표는 “야당과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풀어 가겠다. 더 많은 대화를 위해 안건이 있든 없든 대화를 제안드린다”며 “충분히 대화하겠지만 생산적 대화를 원칙으로 삼고 명분 없이 정부 출범이나 입법을 지연시킨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저희가 찾아가겠다”며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통크게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야당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겠다”고 했

다.

박 수석부대표도 “내란 종식과 협치가 무슨 관계가 있나. 내란 가담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고 이미 대화의 대상이 아닌 것”이라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과 함께 더 성실하게 대화·토론·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입법 과제 우선순위로 내세웠다.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시기와 순서를 봐가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 수석부대표는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은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민생 경제 행보를 하는 만큼 당도 보조를 맞추는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연기된 것으로 안다”며 “명확하지 않은 법조문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선출되면 일정과 안건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과 입법 추진에 더욱 힘을 싣고자 당내는 물론 대야 소통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와 지원실장, 민생부대표를 신설했다.

지원 실장은 윤종균 의원, 민생부대표는 김남근 의원이 각각 맡았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민석 “정치자금법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김민석(사진)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는 환영”이라며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강조했다.

또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면서 “내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



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연루된 ‘1차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 지도 불명확한 표적 사정 사건”이라며 “2002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내게도 묻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썼다.

서울=김선욱 기자

與 “추경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원’ 이 당 입장”

“재정여건 따라 검토…협의 거칠 것” 대통령실 “19일 국무회의 추경 상정”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될 전망이다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선별 지급론이 대두되는데 대해 “정부는 여러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보고 검토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 진

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만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차 추경은 20조원 안팎의 규모가 될

전망이며,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부도 난 국가인 줄 알았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먹튀’ (먹고 튀다·이익만 챙기고 빠지는 일)를 하지 않았나 할 정도”라며 “민생을 회복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집권 여당이자 제1당 원내대표라는 책임의 무게가 막중하지만, 길은 결국은 국민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살피며 정부와 대화하고 야당과 대화하는 속에서 지혜롭게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차기 당 대표 8월 2일 선출

내달 19일 총청부터 순회 경선 대의원 15%·국민여론조사 30%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주위 대변인인 박지혜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임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최근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도 함께 뽑는다.

박 의원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가 3명 이상이면 7월 15일 예비 경선을 하기로 했다”며 “이후 권역별 순회 경선을 한 뒤 8월 2일 전국 대의원이 모이는 전당대

회에서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순회 경선 일정은 △7월 19일 충청 △20일 영남 △26일 호남 △27일 수도권(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다.

후보자 등록일은 7월 10일이다.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당 강령에 따라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로 결정됐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통해 여론조사 기관 2곳이 실시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3명 이상일 때 첫 온라인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를 제외하고 후보 2명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도 필요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출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사퇴한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채우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TK 3선 송언석

전당대회 조속 개최 제안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송언석(62·경북 김천) 의원이 16일 선출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총 투표수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으며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 의원과 이현승(4선·부산 부산진구)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확보함으로써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30표, 16표를 얻었다.

전통적 텃밭인 TK에 지역구를 둔 송 의원은 계파색이 비교적 옅다는 평가를 받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범친윤계로 분류된 바 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송언석 의원이 16일 여의도 국회 회의장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이번 선거에서도 옛 친윤계 등 구(舊) 주류와 TK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투표에 앞서 정견발표를 통해 “당의 안정적인 리더십 구축을 위해 당원과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부가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아울러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5대 개혁안)을 포함해 변화와 쇄신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당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송 신임 원내대표는 107석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거대 여당의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야 하는 동시에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등 대선 패배 이후 당내 수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서울=김선욱 기자